

## 대북 제재 이후 북·중 관광 재개 가능성

-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고조되자, 같은 해 4월 초 중국 정부도 대북 단체관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 3월 8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을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본 결의안은 핵이나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북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의무화 함.
  - 중국의 대북 관광 중단은 상기 결의안에서 명시한 사항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도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실시하는 바가 컸음.
- 중국의 대북 단체관광 중단 지시는 심양, 단둥, 연길, 훈춘 등 북·중 접경 도시에 소재한 여행사에 통보되었으며, 2013년 6월 현재까지 대북 단체관광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 중국의 대북 관광은 크게 단체관광과 개인관광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체관광은 각 지방 관광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관광과 구별됨.

그림 1.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대북 관광의 통로가 되는 주요 도시들



주: www.image.baidu.com

- 그러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도시에 따라서 단체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음.
- 랴오닝성의 성회(省會)인 심양에서는 대북 단체관광이 아직 중단된 상태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단둥에서는 소규모의 관광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 단, 핵실험 이후 정세의 불안정을 이유로 북한으로 관광을 가려는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었고, 관광 상품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sup>1)</sup>

- 단둥이 대북 관광의 가장 큰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가장 밀집된 도시라는 점에서 대북 관광 중단 조치를 지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됨.<sup>2)</sup>

■ 중국의 대북 관광은 빠르면 2013년 6월 말 공식적으로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의 대북 관광이 핵실험 이전과 같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조금씩 재개될 가능성이 큼.

○ 2013년 6월 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訪美) 결과는 중국의 대북 태도가 과거에 비해 변화했음을 보여주었음.<sup>3)</sup>

○ 따라서 대북한 관광도 완전 재개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서서히 재개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 2013.6월 현지 연구조사>

(임민경 연구원)

---

1) 현재 운영 중인 관광 상품은 '단둥-신의주 당일 코스'와 '단둥-평양 3박4일' 관광으로 제한되어 있음.  
2)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3년 4월 10일, 단둥에 소재한 여행사에 일괄적으로 대북 관광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은 사실임.  
3) 중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제재 실천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는 2013년 2월 초 방미 당시와 비교할 때 중국의 대북한 태도가 보다 강경하게 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